

#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은석\*\* · 안승재\*\*\* · 함선유 ·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거론되는 사토리 세대, 88만원 세대와 같은 세대론이 실재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경험의 성층화 과정을 통해 실제 세대가 출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대 차이는 계층 간 불평등의 한 단면으로, 세대론이 계층 간 불평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본 연구는 두 상반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의 <가족 범위와 인식에 대한 국제 조사>에 참여한 만 20~59세의 한국인 972명과 일본인 478명의 가족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응답 데이터를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386세대와 일본의 사토리세대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낮은 신뢰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은 동질혼과 동성가족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저소득층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었고, 일본의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중위소득층,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인식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타 계층과 다른 인식을 보였다.

**주제어** 세대갈등, 가족가치, 386세대, 사토리 세대, 비교연구

##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계층별로 비교하여 세대 갈등의 실재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대담론’으로 압축한 88만원 세대론과 사토리(さとり) 세대론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청년 세대의 문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 있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과 학부장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는 진단에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기가 지나가고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양국 모두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직위를 누리는 기성세대’와 ‘취업난과 저임금에 내몰린 청년 세대’ 사이의 간극은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세대론’이 양국의 사회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단층선으로 언론과 연구자, 정치인들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세대 담론’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각 세대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파악하여 세대를 정의하는 작업은 상당한 통찰이 필요하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세대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동질성을 특정 코호트가 가지고 있는지, 즉, 그 세대가 ‘실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어느 세대가 ‘더 받고/덜 받았는지’를 밝히려려면 해당 연령 코호트(cohort) 별로 ‘생애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분석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정확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가족 내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이루어지는, 즉, 계보학적인 의미에서의 세대 간 사적이전을 고려한다면 세대 간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가 내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계급·계층 간 불평등의 한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Attias-Donfut and Arber, 2002).

그래서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범람하고 있는 ‘세대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한·일 양국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지수준은 가족과 시장, 정부에 의해 구성되며 이 세 주체 간의 역할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다(Esping-Andersen, 2009). 그렇기에 가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가용한 복지 자원으로써의 가족, 그리고 책임 대상으로서의 가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생애주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각 개인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각 구성원들의 선호가 집약·반영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적 영역의 복지 발달수준과도 조응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후 근대화와 탈근대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2011)—일본의 경우 ‘준-압축적 근대화(Ochiai, 2011)’—과정을 거치면서 각 구성원은 변화의 파고를 제도화된 복지가 아닌 가족에 의존하며 생존해

왔다. 양국 모두 전후 급작스럽게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각 개인은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적응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자원은 가족의 지원 관계뿐이었다(장경섭, 2001). 즉, 가족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지지를 공급하고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경쟁과정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 간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배한 후 성취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기본단위로 작동해 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생활을 위해 손자녀를 돌봐주기도 한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부모로부터 독립을 연기한다. 어른을 공경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유교 문화의 특성 역시 아직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이 바로 미약한 공적영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애주기적인 위험을 가용 가능한 가족자원을 통해 극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가족주의 전략’의 사례들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정부는 부족한 공적영역의 확충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족 중심의 규범을 재생산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기금식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한정적이었기에 가족의 자원 수준에 의해 각 개인이 누리는 복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은석, 2007; 장경섭 외, 2015). 이런 현실에서 ‘세대론’에만 집중하는 것은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각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각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청년 세대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의 동거를 지속한다는 김수정과 김영(2013)의 연구는 세대론의 이면에 있는 계층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라는 틀로만 확인하는 것은 계층이라는 큰 틀을 누락하고 세대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를 세대 문제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김선기, 2014).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세대 중심 접근법의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칼 만하임의 ‘역사·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세대’ 정의 방식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경험의 성층화’ 과정을 통하여 해당 세대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한 코호트를 동일 세대로 간주하였다. 양국의

세대 구분 방식은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에 기반하여 가설적으로 명명한 후, 가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각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특이성이 발견되는 몇몇 세대 집단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대 담론에 대하여 세밀한 논증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잠정적인 세대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세대론'의 유효성

역사·사회학적 의미에서 세대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규정방식을 받아들인다. 만하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세대위치) 이들이 모두 다 의미 있는 하나의 '실재 세대 또는 세대 단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 시기가 다른 이들은 성장하면서 당연히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하임은 이를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경험의 여러 층위가 겹겹이 쌓이면서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각 코호트의 사고와 의식이 달라지지만, 이러한 성층화는 여전히 세대 출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들 집단이 상호 간의 연계와 유사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동의 연대를 만들어 가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세대(실재 세대 혹은 세대 단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하임은 세대 형성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역사학적 접근방식과 사회학적 접근방식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17세에서 25세 사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Mannheim, 1952).

이러한 '진짜 세대'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핵심요인은 '사회변동의 속도'이다.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후 근대화 와 탈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압축적 근대화(장경섭, 2011)—일본의 경우 ‘준-압축적 근대화(Ochiai, 2011)’—과정을 거치면서 각 구성원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은 급작스러운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적응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자원은 가족 구성원의 지원 관계뿐이었다(장경섭, 2001). 만하임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전후 시기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세대의 성층화’ 과정을 겪은 집단인 ‘진짜 세대’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의 균열을 ‘세대론’을 통해서만 해석하는 시도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현상을 세대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김선기, 2014). 특히, 특정 세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고정관념을 섞어 의인화하면서 특정 세대의 불행을 합리화하려는 사회적 프레임이 등장할 경우, 이는 특정 연령층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강화하며, 세대 차이를 과장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게 된다(박권일, 2009; 박재홍, 2009).

최근 한일 양국에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논의들—‘88만원 세대’와 ‘사토리 세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해당 세대의 문제일까? 세대론에서 다루지고 있는 청년층의 불안정과 빈곤 문제는 사실상 불안전 노동의 전면화라는 문제의 하위범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박권일, 2009).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노동사회의 위기다(김선기, 2014). 따라서 세대론이 정당화되려면 이러한 사회 변화가 세대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대 간의 차이가 혹시 성별이나 계층 등 여타 사회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일본 청년층의 ‘달관(達觀)’ 현상을 연구한 노리토시(古市憲壽, 2014) 역시 부유한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가족 복지가 있었기에 현재의 청년층이 소득도 낮고 좋은 일자리도 없지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세대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대론이 실존하는 다른 불평등, 즉, 계급 간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적 오류를 야기한다는 점이다(Kohli, 2010). 청년층과 노년층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경쟁한다는 점은 근대화 이전 사회에도 있었던,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현상이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오히려 계급에 의한 차이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망률, 연금소득, 건강상태, 사회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증가하는 등 고령자 내부의 격차가 다차원화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신광영(2009)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세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하는지 세대 내의 불평등, 즉, 계급 효과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대 간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계급 간의 불평등이 연령 증가와 함께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역시 세대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스펙 경쟁이 젊은 세대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중간계급과 자본가 계급 출신 대학생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신광영·문수연, 2014).

그렇기에 노동시장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세대별 가족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 세대의 문제인지, 세대라는 인식들이 유효한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만 20~59세 응답자 2,000여 명을 각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이 소득이나 성별, 거주지, 결혼여부 등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동질적인 가족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2. 한국과 일본의 세대 구분 방식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범주화하여 표적화(targeting)하려는 상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세대 구분을 시도할 때는 주로 문화적·행태적 차이에 기반한 세대 구분 방식을 시도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한 세대 명칭을 신조어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 방식은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그러한 세대 구분은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적 변화와 조응하기보다는, 특정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집단에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세대론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10년 단위로 연령대를 끊어서 세대를 구분하거나, 특정한 생애단계에 속한 집단을 하나의 세대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며, 이러한 방식은 학술연구와 상업 영역 양쪽에서 활용된다. 상업 영역에서의 경우,

특정 생애단계나 연령대에 속한 집단(특히, 학령인구)을 여타 집단과 구분하여 타겟팅하기 위한 목적(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제의 주 고객 집단인 청소년집단을 1318 세대로 명명)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세대 구분 방식은 각 연령집단이 역사적 경험을 누적하면서 실제세대로 발현되었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집단 경험’에 의해 실제 세대의 정립이 이루어진다는 만하임의 이론에 근거하여 역사적 경험과 시대 특성에 기반하여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세대의 구분과 함께 세대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를 구분하는 일이다(전상진, 2004; 박명호, 2009; 허석재, 2014). 세대 효과는 각각의 세대가 세대 내에서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동질감에 기반하여 해당 세대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을, 연령 효과는 인간이 생애주기 안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보수화)를 일컫는다. 많은 연구들이 세대연구에 출생코호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출생 코호트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경우 그것이 연령의 효과인지 세대의 효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두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장기간 추적 조사한 자료가 부재하기에 자료의 해석과정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는 횡단면 값이므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 시기효과를 구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통계적 처리 과정상의 난점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대별 구분 방식과 명칭은 선행연구에 의존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세대 구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세대 구분

만하임의 이론에 근거하여 역사적·시대적 차원에서 세대 구분을 시도한 박재홍(2009, 2017)은 한국인들의 세대를 구분하기 위한 ‘결정적 집단 경험’으로 일제 식민지 경험 여부, 한국전쟁 경험 여부,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민주화운동과 국내외 정치 상황 경험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과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집단인 1957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표 1 세대 명칭의 유형별 특성

구성기준		세대명칭	특성
역사적 경험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세대, 419 세대, 유신세대, IMF 세대, W세대, 광장세대 등	코호트 시각 잘 반영 정치 경제 문화적 사건과 상 황, 경험 중시, 상업적 활용 도 낮음
	시대특성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탈냉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88만원 세대	
나이/ 생애단계	10년 단위	2030세대, 5060세대, 1020세대	연령/코호트효과 존재, 상업 적 목적의 차별화
	생애단계	청년세대, 대학생세대, 노년세대, 실버세대	
문화적 행태적 특성	문화적· 행태적 특성	신세대, X세대, N세대, 디지털세대, 실크세대, 웹2.0 세대	문화 및 행태적 특성 상업적 목적의 차별화
	소비행태	P세대, WINE세대, MOSAIC 세대	

출처: 박재홍(2009) p.15 일부 수정.

의 경험을 고려하여 이 인구집단을 ‘유신 세대’(박명호, 2009; 노환희 외, 2013; 박재홍, 2009; 윤상철, 2009; 조중빈, 2003), ‘386세대’(노환희 외, 2013; 어수영, 2006; 윤상철, 2009; 박명호, 2009; 박재홍, 2017)와 ‘IMF 세대’(김혜경, 2013; 박재홍, 2009; 노환희 외, 2013), 그리고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 박재홍, 2009) 등 총 4개 세대집단으로 잠정적으로 구분하였다. 세대 명칭이나 구분방식은 연구관점과 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학교나 군대, 직장 등의 단체생활을 통해 17세에서 25세 사이에 실재세대가 출현하게 된다는 이론적 논의에 입각해서 볼 때 이러한 구분방식은 학술적으로 통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유신 세대와 386세대, IMF 세대, 88만원 세대는 세대의식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유신 세대의 경우, 72년 유신 개헌 이후 독재정권에 의한 통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초기 성년기를 보낸 집단이다. 이들 세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사회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제개발에 의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 역시 계속되었지만, 대학등록률이 9.8%대에 머물러 높지 않았고, 전국 단위의 대학생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인지라 학생운동 경험이 386세대만큼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국의 세대 구분

	유신 세대	386세대	IMF 세대	88만원 세대
출생연도	57~61년생	62~71년생	72~82년생	83~94년생
1인당 GNI 연평균 증가율	6% (1976~1980)	9% (1981~1990)	5% (1991~2001)	3% (2002~2013)
평균 대학등록률	9.8% (1976~1980)	29.1% (1981~1990)	57.3% (1991~2001)	95.6% (2002~2013)
초기성년기 역사적사건	1차 베이비붐 72년 유신	80년 광주항쟁 87년 민주항쟁	91년 동구권붕괴 97년 외환위기	02년 월드컵, 노무현 당선 08년 금융위기, 촛불집회

주: 1인당 GNI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함.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수록 통계를 연구진이 계산함.

이에 비해 386세대의 경우 반미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변혁이론에 기반하여 대학생활을 보내며 역사적으로 성공한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정치적 진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박병영, 2007; 박재홍, 2017)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세대의 대학진학률이 36.4%에 불과한데, 대학에 진학한 일부 명문대학 출신 엘리트 운동권이 이들 코호트를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나, 386세대의 정치적 정체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약하지만, 소득재분배 등의 전통적인 좌/우 인식에 있어서는 다른 코호트와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박병영, 2007) 역시 이들 세대의 실재성 검증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IMF 세대는 1970년생부터 82년생으로 이루어진 코호트로, 17~25세 사이에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2004년의 사회조사 자료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집합기억을 분석한 허석재(2014)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한국인이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97년 IMF 외환위기(28.84%)를 꼽았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평생고용에 근거해 있던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으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부계 가족주의 역시 해체되었다(김혜경, 2013). 70~82년생 코호트에 대해서는 사실 386세대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들 집단이 실제세대로 발현되었는지 역시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75년생 50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외환위기로 강제적 개인화의 양상을 이들 코호트가 경험하고 있고, 가족책임과 역

할인식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김혜경(2013)의 지적을 고려할 때, 이들 코호트의 실제세대화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88만원 세대는 1983년생부터 96년생으로 이루어진 코호트이다. 우석훈과 박권일(2007)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대 간 경쟁, 세대 간 착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 전반에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가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세대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회 내 각 영역에서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386세대의 경우, 세대 내부의 응집력이 강고하기에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세대를 착취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세대로의 전환 경험 없이 신자유주의적 압력에 대하여 ‘스펙 쌓기’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책만을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계급 문제를 세대 내의 불평등 문제로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신광영, 2009; 신광영·문수연, 2014), 이해찬 세대, 광역화 1세대로 불리며 청소년기에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는 이들 집단의 성장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 코호트가 실제세대로 전환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 2) 일본의 세대 구분

일본의 세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왔다. 일본의 연구에서 역시 세대 구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정 연령대, 코호트가 세대를 대신하기도 했고 상업적 영역에서부터 고령화의 예측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세대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횡단적으로 정리한 사사노 미사에(笹野美佐恵, 2017), 타카세 외(Takase et al., 2009) 등의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출생 코호트별로 초기 성년기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본의 세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일본의 세대 구분에서 전후 일본의 세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세대는 단카이 세대이다(笹野美佐恵, 2017). 전후 첫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이기도 한 단카이 세대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대가족의 모습인 성별분업에 따른 핵가족이 대중화되었

표 3 일본의 세대 구분

	신진루이 세대	단카이 주니어 세대	잃어버린 세대	사토리 세대
출생연도	57~68년생	69~74년생	75~82년생	83~94년생
1인당 GNI 연평균 증가율	4% (1976~1987)	3% (1988~1993)	1% (1994~2001)	1% (2002~2013)
평균 대학등록률	28.9% (1976~1987)	29.3% (1988~1993)	44.3% (1994~2001)	56.5% (2002~2013)
초기 청년기 역사적 사건	오일쇼크(1973, 1976) 록히드 사건(1976)	남녀 고용평등법 강화 (1986) Black Monday(1987) 베를린장벽 붕괴 (1989)	1955 정치 시스템 붕괴(1993) 지하철 사린 가스 사 건(1995) 은행과 기업의 도산 (1998)	장기요양보험출범 (2000) 서브프라임모기지 (2007)

주: 1인당 GNI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함.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수록 통계를 연구진이 계산함.

고, 생애과정 등 현재 일본 사회에서 표준 모습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습들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笹野美佐恵, 2017). 전전의 교육과 다른 교육을 받고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 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전의 세대와는 다른 일본세대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포스트 단카이 세대를 아우르는 말은 신진루이, 모라토리움, 시라케 세대, 버블 세대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세대는 서양의 x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로 주로 일본의 6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의 구분에 사용되고 있다. 이 시기의 일본은 6%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로 일본경제의 절정기<sup>1</sup>에 청년기를 보낸 이 세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이다. 신진루이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3무주의(무기력, 무감동, 무관심)나 5무주의(3무+무책임, 무례함)로 불리기도 하며 소비 욕구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Takase, 2009).

1970년대 이후 80년대 초에 태어난 일본의 세대들은 앞서의 세대와 다르게

<sup>1</sup> 신진루이세대가 20대이던 1976~1987년에 일본의 연평균 1인당 GNI 성장률은 4%로, 다른 세대의 초기 청년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고도성장이 끝난 후의 세대들이다. 저성장시대를 아우르는 세대 담론은 단카이 주니어, 로스트제너레이션, 사토리, 후토리 세대 등이 있다. 버블경제가 끝난 후 일본은 오일쇼크를 겪으며 경제성장의 속도가 감소하고 역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먼저 단카이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단카이 세대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 세대가 20대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경제성장이 크게 하락하고 대학진학률은 증가하여 앞선 세대와는 달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난을 겪게 된 세대이다. 버블 경기 붕괴의 여파로 취업난에 부딪친 첫 세대이며 세대 내에서 취업이 갈라진 세대의 시작이 된 세대이기도 한다. 또한 기존 세대와 다르게 기업이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형 복지의 틀에 들어갈 수 없는 층이 증가하게 된 첫 세대이기도 하다(笹野美佐恵, 2017).

잃어버린 세대는 풍족한 경제성장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버블 경기가 붕괴되어 취업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동 세대 내에서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 세대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과 대학을 졸업해도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하고 니트, 프리터 등 비정규직 종사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 내 임금격차가 커지며 중산계층의 사회라고 인식했던 일본에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었고 윗세대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자아찾기에 몰두한 청년들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사노 미사에(2017)에 의하면 이는 일본이 후기 근대로 진입하여 거대 담론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앞선 세대의 표준적인 삶의 궤적을 따르기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애쓰는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를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 이 세대는 교육제도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잃어버린 세대와는 달리 심한 경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취업이 이전 세대보다 더욱 어려워진 세대이다.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같이 흔히 이 세대를 탈존주의의 세대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토리 세대의 경우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소소한 삶의 의미를 찾는 낙관적 탈존주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관찰되기도 한다(김홍중, 2015).

### 3. 가족가치관과 세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서도 가족가치관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향성은 구성원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다영, 2005). 또한 가족은 양육, 돌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의 각 분야와 상호작용하며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다(안호용·김홍주, 2000). 따라서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가족 경험이 있으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가족’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치 문화적 성향, 경제적 삶의 조건 등이 세대라는 집합적인 특성으로 같등하게 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박경숙 외, 2013). 한국과 일본은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나가는 도구적 가족주의 전략이 사용되어 왔으며, 복지 제도나 교육 제도 역시 이러한 가족 중심의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장경섭 외, 2015).

최근 일본 청년층의 이른바 ‘달관(達觀)’ 현상을 연구한 노리토시(2014)는 부유한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가족 복지가 있었기에 현재의 청년층이 소득도 낮고 일자리도 없지만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과 한국에서 청년들은 빈곤 방어를 위하여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가족주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에 속할 비율이 1.5배, 일본에서는 3배나 높아진다(김수정·김영, 2013). 이처럼 가족은 양국에서 개인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결혼이나 성 역할, 부모의 책임, 부모의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와 가용한 전략, 그리고 규

범을 뜻한다. 한일 양국이 공동적으로 겪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 등의 경제적 요인과 ‘급속하게 확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은’ 저복지 상황(은석, 2007)을 고려할 때, 가족에 대한 인식 연구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각 세대의 견해와 전략을 가늠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른 가치관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들이 가장 빈번히 상호작용하는 장(場) 역시 가족(박경숙 외, 2013)이라는 점에서 가족가치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는 앞으로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의 차이만을 드러내는 가족 가치관 연구는 세대 내 계층별로 겪게 되는 가족 경험의 차이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친족 간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등 도구적 가족주의의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정재기, 2007), 가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은 세대보다 계층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중상류 계급일 경우 그 자녀가 88만원 비정규직의 뒷에 빠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리 없다”는 박재홍(2009: 28)의 지적이나 “고도성장기의 혜택을 듬뿍 받아 평균 저축액이 1,593엔(50대)과 1,952엔(60대)에 이르는 부모세대의 가족복지 제공이 젊은이의 빈곤을 감춘다.”는 노리토시(2014: 292)의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은 역설적이게도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더 큰 사회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Yamashita et al., 2013). 인구 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맞벌이의 보편화 같은 신사회 위협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발달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 자원이 없을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가치관에 대한 세대 간 동질성 차이성을 밝히고 갈등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양성평등적 역할관 등을 가족가치관으로 구분하고 있다(김홍규·원애경, 2003; 김혜영, 2001; 정옥분 외, 2007; 권복순·김태자, 2008; 김정신, 1998; 김예희, 2010; 옥선화 외, 2000). 다양하게 구성된 가족가치관은 세대 간 가치와 목표, 태도, 이데올로기, 기여와 분배 등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관념적 갈등과 배분적 갈등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양상 및 사회문제의 예상을 위하여 인식

의 차이가 복지제도와의 조응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도구주의적 가족관(부양 및 효의식 포함), 정부의 복지책임(보육, 노후소득)과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1) 도구주의적 가족관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복합적인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겪었다. 식민통치, 전쟁, 급격한 산업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나가는 가족주의 전략이 사용되어왔다(장경섭, 2001). 가령, 한국에서 자본주의로 이행 과정은 일제와 미군정, 자유주의 정권의 수립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통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적응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대중들에게 가족은 유일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도구주의적 가족관(instrumental familism)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한다. 장경섭(2001)은 세대 내 계층이동(intra-generational class mobility)의 어려움을 실감한 한국인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취업, 사업, 혼인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세대 간 계층이동(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의 기회를 노리는 현상이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이 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경쟁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고 그 본질을 상실하는 현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단순히 가족의 규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 중심의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장경섭 외, 2015). 가족을 보편적인 사회부양기제로 보고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명시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나, 장기요양보험의 세부 규정들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축적인 근대화와 가족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목격된다. 일본 역시 준(semi)-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며 가족주의적인 구조를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사회규범과 제도가 발전해왔다(Ochiai, 2011).

## 2) 정부의 복지책임

최근의 세대 갈등에 대한 언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회를 둘러싼 세대 간 이해관계의 대립현상이다. 일자리, 복지 등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세대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배분에 있어 형평성의 논의가 나타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세대 간 경제적 기회의 차이와 부담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가족주의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래 후기 산업화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족의 실패”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다(Yamashita et al., 2013). 가족의 역량은 줄어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시장의 위험은 증가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가족과 정부 중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시사한다(양옥경, 2002). 즉,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지수준은 가족과 시장, 정부에 의해 구성되며 이 세 주체 간의 역할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기에(Esping-Andersen, 2009), 노후소득보장이나 돌봄에 대한 정부의 역할, 책임 범위, 가족의 역할이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 개인의 인식과 전략, 대응 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복지책임에 대한 의식은 흔히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역동적인 관계를 보인다(최균·류진석, 2000). 일반적으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책임은 국가책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각기 다른 산업 환경과 사회문제를 경험한 각 세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의 해결책은 상이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책임에 관한 문항은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관한 세대 간 견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만약 이러한 문항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실재(實在)한다면 이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관련한 문항을 비교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결혼 혹은 자녀양육의 규범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새로운 인식의 경



우 세대별로 이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극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결혼관에 대한 인식이 각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안정적이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 가족관 역시 세대별로 이질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즉, 비전형적인 가족관에 관한 문항들은 세대 간 인식의 실제성을 검토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가족관을 토대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거하며 서로 성적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생활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정윤경 외, 1997). ‘다양한 가족’이란 앞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동거, 한부모 가족, 복합가족(step family), 동성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구 사회에서 동거가 결혼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낼 정도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 된<sup>2</sup>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가족관을 이탈한 사례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유입되었다. 가령 OECD 34개국 중 28개 국가에서 동거 비율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5년 간통죄가 논쟁 속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결혼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최근 들어서 변화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 결혼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양국 모두 OECD 국가 가운데 ‘동성애자에 대한 법률적 인정 수준(Global Index on Legal Recognition of Homosexual Orientation)’이 가장 낮다(Valfort, 2017). 또한 해당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성을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집단 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sup>2</sup> OECD Family Database에 공표된 2011년 기준 자료를 보면, 에스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20~34세 청년들은 결혼보다 동거의 비율이 더 높았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수집한 <가족 범위와 인식에 대한 국제 조사><sup>3</sup>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통적 가족에서부터 변화하는 가족까지 가족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는 한국과 일본 만 20~5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15년 2월, 일본의 경우 2017년 8월~9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분석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남성이 50.6%, 여성 49.4%, 일본은 남성, 여성 50.6%, 49.4%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대로 구분해보았을 경우 한국의 경우 20대 20.5%, 30대 27.6%, 40대 28.8%, 50대 23.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20대가 17.2%, 30대 29.1%, 40대 27.2%, 50대 26.6%로 일본이 한국보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경험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40% 이상이 미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과 일본의 20대 30대 인구가 약 5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만혼, 비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경제수준을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24.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집단이 9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도구주의적 가족관, 정부의 책임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등 세 영역에 대하여 각 2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된 값을 투입한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1(매우 반대)~5(매우 동의) 중 하나의 값을 선택하게 된다. 측정 문항은 표 5와 같다.

<sup>3</sup> <가족 범위와 인식에 대한 국제 조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본 연구진이 진행한 조사이다. 가족의 범위, 다양한 가족가치관, 정부의 역할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한국, 일본, 중국, 스웨덴, 미국, 이탈리아 등 총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에 따라 층화비례할당 추출로 표본을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표 4 조사대상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한국 (n=972)	일본 (n=478)	
성별	남성	50.6	50.6	
	여성	49.4	49.4	
연령대	20~29세	20.5	17.2	
	30~39세	27.6	29.1	
	40~49세	28.8	27.2	
	50~59세	23.1	26.6	
결혼 여부	미혼	40.1	40.0	
	결혼경험 유	59.9	60.0	
교육수준	중학교 졸	0.7	3.3	
	고등학교 졸	19.2	24.7	
	2년제 대학/전문대학	17.1	22.4	
	4년제 대학교	53.7	45.6	
	대학원 석사	7.5	3.3	
	대학원 박사	1.7	0.6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	76.1	53.8	
	경제활동 하지 않음	23.9	46.2	
경제적 수준	저소득(중위소득 50% 미만)	23.9	9.4	
	중위소득(50~150%)	58.1	60.6	
	고소득(150% 초과)	18.0	30.0	
세대	한국	88만원 세대	32.5	
		IMF 세대	32.1	
		386세대	25.1	
		산업화 세대	10.3	
	일본	사토리 세대		31.2
		로스트제너레이션		23.6
		단카이주니어 세대		15.7
		신진루이 세대		29.5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양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을 먼저 살펴보자. 양국 국민들의 인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도구주의적 가족관 관련 문항들이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하여 동류혼이나 부모부양에 있어

4 “동성(여성)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역시 조사에 포함되었으나, 문항의 의미와 분석결과가 해당 문항과 유사하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표 5 측정 문항

번호	분류	문항	척도
①	도구주의적 가족관	동질혼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
②		노부모 경제적 부양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③	정부책임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아동 돌봄(양육)
④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	노후 소득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동성(남성) 부부의 자녀 양육 <sup>5</sup>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⑥		동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표 6 분석대상 문항 분포

번호	분류	문항	한국		일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도구주의적 가족관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	3.54	1.01	2.29	.96
②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3.44	.90	2.74	.94
③	정부책임	아동 돌봄(양육)	3.74	.89	3.36	.93
④		노후 소득	3.85	.84	3.52	.92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동성인 남성 부모도 남성-여성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68	1.06	2.91	.82
⑥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2.97	1.21	3.03	1.12

서 더 높은 동의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아동 돌봄과 노후소득 영역에 대한 정부 책임성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더 높은 동의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동의수준이 약간 더 높긴 하지만, 양국 모두 보수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국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실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모형을 도입하였다. 세대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차이, 즉, 세대 간 차이와 함께 세대 내의 차이, 다시 말해 세대 내 다양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笹野美佐恵, 2017). 이를 위해서 한 사회의 균열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소득 계층을 모델링에 반영하여 계층에 따른 격차와 세대 간의 격차 중 어떤 것이 더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만약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격차에 비하여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더 크고 선명하게 나타난다면 세대 균열이 계급의 균열에 비하여 더 공고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와 계층의 효과를 명료히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과 연령제곱항, 성별, 교육수준, 결혼경험 여부 등은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 IV.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세대 간 인식 차이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은 국가별·문화별로 이루어졌다. 세대 변수는 더미변수로 투입되었으며, 세대 변수의 기준 집단(reference)은 우리의 조사대상 중 가장 연령층이 높은 유신세대(한국)와 신진 루이세대(일본)이다. 소득 계층 역시 더미변수로 투입되었으며 기준집단은 고소득 집단이다. 세대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령 문항을 연속변수로 따로 투입하였으며, 인식과 연령 사이에 존재하는 U자 또는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연령제곱항도 투입하였다. 이 외에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결혼경험, 거주지역, 경제활동 유무, 교육수준 등의 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한국 조사에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인의 인식 차이 결정요인

한국인들의 인식 차이에 대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동질혼에 대하여 묻은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계층에 따른 인식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 비해서 고소득 가구에 속한 응답자일수록 동질혼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았다. 또한 결혼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문항에 대해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혼에 대해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을 이러한 결과는 사회 이동성 저하로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가족의 재생산을 사회경제적 지위 유지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든 세대에 걸쳐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고소득-고학력 집단에서 더 두드러졌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벌이만으로는 부의 축적과 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 현실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회보장제도마저 취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조건을 재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고소득-고학력 집단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의 결혼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통계청의 ‘2015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 모두 대졸인 부부의 비율은 2011년 53.1%였던 것이 2015년에는 54.4%로 증가하였다.<sup>5</sup>

자녀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특히 세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해 부모 세대의 실패를 초기 성년기에 경험했던 IMF 세대의 동의수준이 여타 세대에 비해 상당히

<sup>5</sup> 미국 법학자인 준 카르본 미네소타대 교수와 나오미 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저서 미국 젊은 층의 결혼 양상 변화를 분석한 ‘결혼시장(시대의 창)’에서 “(2008~2010년) 소득 상위 1%가 미국 소득의 약 24%를 가져가고, 하위 90%의 임금은 계속 떨어지는 엄청난 소득 격차로 인해 남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이 변화했다”며 “어느 때보다 미국 남녀가 상대의 소득을 중요한 매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가 극단적으로 커진 만큼 개인에게 소득이 의미하는 바는 더 커졌고, 이런 환경에서 남녀 모두, 특히 고소득 남녀가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결론은 동질혼이 되었다는 것이다(“계층이동 사다리 닫힌 사회일수록 동질혼 강화”, 『한국일보』 2017/06/24).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문항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동의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주로 '부계 혈통'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 차이는 얼마 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소설 『82년생 김지영』 내에 그려진 대로 가족 내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으로는 부양책임을 둘러싼 공적 제도의 확대에 대한 욕구 차이로, 그리고 양성 간의 젠더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흥미로운 지점은 연령과 연령제공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부호는 반대라는 점이다. 이는 노부모 부양 동의수준과 연령 간에 U자형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20~59세 사이에서는 연령과 동의수준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56년 이전에 출생한 집단에서는 노부모부양책임을 대한 동의수준이 유신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정부책임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에서는 약간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노후소득에 대해서는 386세대만이 다른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다. 프레스턴(Preston, 1984)에 의해 노인복지예산과 아동복지예산 간의 상쇄현상이 지적된 이해, 이 두 문항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드러내는 문항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일 노후소득보장책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컸다면, 이는 연금 비용 부담 등 현실 정치 영역에서의 세대 간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돌봄의 경우, 386세대의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경제활동 하는 집단과 결혼 경험 있는 집단의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노후소득 책임에 대하여는 386세대의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86세대의 동의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386세대의 코호트는 이제 50대에 속한다. 50대는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시기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연령대에 속한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타 세대에 비해 커서 본인들의 부담이 더 배가될 수 있는 아동 돌봄이나 노후 소득에 대해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386세대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사회학적 세대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 세대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

표 7 문항별 한국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한국											
		①		②		③		④		⑤		⑥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세대 (유신세대=0)	88만원 세대	.051	(.161)	-.017	(.143)	-.004	(.146)	-.019	(.138)	.131	(.172)	.120	(.192)
	IMF세대	.000	(.157)	.230*	(.139)	-.016	(.142)	-.092	(.134)	.194	(.167)	.213	(.188)
	386세대	-.021	(.101)	-.032	(.089)	-.171*	(.091)	-.151*	(.086)	.186	(.107)	.114	(.120)
소득 계층 (고소득=0)	저소득 (중위 50% 미만)	-.318**	(.103)	-.077	(.091)	.006	(.093)	.087	(.088)	.304*	(.109)	-.191	(.122)
	중위소득 (50~150%)	-.137	(.086)	-.048	(.076)	.061	(.078)	.058	(.074)	.228**	(.092)	-.019	(.103)
성별(여성=0)		-.234***	(.065)	.465***	(.057)	.000	(.059)	-.001	(.055)	-.267*	(.069)	.581***	(.077)
연령		.005	(.041)	-.082*	(.036)	-.021	(.037)	-.022	(.035)	-.111***	(.044)	-.016	(.049)
연령제곱		-0.000016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0	(.001)
교육수준		.082*	(.034)	.052*	(.030)	-.007	(.031)	-.013	(.029)	.058	(.036)	.026	(.041)
결혼경험 (결혼경험 없음=0)		.369***	(.090)	-.240**	(.080)	.231**	(.082)	.065	(.077)	-.237*	(.096)	-.246*	(.108)
경제활동유무 (경제활동무=0)		-.044	(.079)	-.005	(.070)	.165*	(.072)	.109	(.068)	.199*	(.084)	.014	(.095)
(상수)		3.158	(.668)	4.530	(.592)	4.128	(.604)	4.335	(.571)	4.212	(.712)	3.079	(.798)

주: \* p < .10 \*\* p < .05 \*\*\* p < .01

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분석모형에서 소득 변수를 통해 계층적 특성을 통제하고 있기에 후자의 설명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한 두 문항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경험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좀 더 수용적으로 나타났으며 세대에 의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결국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서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동거 등 비혼 형태의 가족형성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혼외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다만 동성부모가 이성부모만큼 잘 키울 수 있다는 문



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길고, 결혼 안정성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나 커플의 결합방식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수용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성 가족 등에 대한 수용도는 학력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Valfort, 2017), 우리의 분석 결과는 이와 배치되기에 추후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동거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 세대나 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2. 일본인의 인식 차이 결정요인

일본인들의 인식구조는 한국과는 약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한국인들보다 동의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모든 문항에서 교육수준은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우선, 가족의 도구성에 대한 문항부터 살펴보자. 두 문항 모두에서 세대에 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의수준 역시 낮았다. 동질혼에 대한 동의수준을 묻는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세대나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만이 드러났는데 평균적인 동의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노부모 부양의식 역시 세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동의수준을, 중간소득 가구에 속한 응답자가 고소득 계층에 비해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치아이(Ochiai, 2011)가 설명하는 일본 가족의 도구성, 즉 일본 사회가 준-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각 개인에게 노출되어 있던 여러 위험을 ‘가족’을 자원으로 삼아 대응해왔다는 분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노부모 부양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과 연령제곱항이 모두 유의미하였는데, 그 부호가 상이한 역 U자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동일문항에 대해서 U자형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두 나라의 공적 연금 발달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즉, 은퇴를 가까이 하게 될수록 노후 생활을 공적 연금을 통해서만 지탱하기 어려운 한국의 노인들은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게 되는 반면, 일본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이 16만 엔에 달하기에 자녀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책임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은 일본 세대문제의 특수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가장 젊은 코호트인 사토리세대의 정부책임성 인식이 타 세대에 비해 크게 비교될 만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 경향을 통제하고도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상당히 독특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는 일본의 타 세대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내셔널리즘적인 일본의 갖가지 제도 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다”(古市憲壽, 2014). 이들 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공공부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운영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타 세대 사이에서는 정부 책임성에 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토리세대의 실재성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복지 재원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세대 갈등이 예고되는 지점이다.

아동 돌봄의 정부책임성에 관한 문항의 경우, 저소득층, 그리고 결혼경험 있는 응답자의 동의수준이 타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아동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의 경우 무상보육이 아니고, 총 보육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육시설 입소 자체가 어려워 어린 자녀를 맡기지 못한 젊은 층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최근 2017년 총선의 아베-자민당 핵심공약인 ‘2조 엔 복지패키지’중 1조 1천억 엔을 3~5세 어린이 유치원 및 보육원 무상화와 보육원 입소난 해결에 투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이 더 높은 정부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 동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동의수준이 낮았으며 세대나 계층에 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의 수준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낮은 수용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동성 가족 등에 대한 수용도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 8 문항별 일본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일본											
		①		②		③		④		⑤		⑥	
		동질혼		노부모 경제적 부양		정부의 아동 돌봄 책임		정부의 노후소득 책임		동성(남성)부부의 자녀 양육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세대 (신진루이세대=0)	사토리세대	-1.96	(.207)	-.143	(.203)	-.431*	(.202)	-.460*	(.200)	-.147	(.179)	-.392	(.245)
	로스트세대	-.270	(.225)	-.265	(.221)	-.243	(.220)	-.255	(.217)	-.099	(.194)	-.334	(.266)
	단카이주니어세대	.050	(.198)	-.074	(.194)	-.237	(.193)	-.168	(.191)	-.107	(.171)	-.123	(.234)
소득계층 (고소득=0)	저소득 (중위 50% 미만)	.000	(.167)	.055	(.164)	.285*	(.163)	.106	(.161)	.089	(.144)	.164	(.198)
	중위소득 (50~150%)	-.086	(.098)	-.231*	(.096)	.101	(.095)	.138	(.094)	-.084	(.084)	.013	(.116)
성별(여성=0)		-.023	(.091)	.149*	(.089)	-.052	(.088)	-.160*	(.087)	-.244**	(.078)	.159	(.107)
연령		.035	(.053)	.125*	(.052)	.047	(.052)	.063	(.051)	.048	(.046)	.102	(.063)
연령제곱		.000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교육수준		.128**	(.047)	.072	(.046)	.081*	(.046)	.031	(.045)	.055	(.041)	.012	(.056)
결혼경험 (결혼경험 없음=0)		.154	(.104)	.041	(.102)	.227*	(.102)	.113	(.101)	-.102	(.090)	-.043	(.123)
경제활동유무 (경제활동유무=0)		-.138	(.093)	.028	(.091)	.113	(.091)	.046	(.090)	.046	(.080)	.001	(.110)
(상수)		1.355	(.886)	.444	(.869)	2.604	(.864)	2.576	(.855)	2.126	(.765)	1.361	(1.048)

주: \* p < .10 \*p < .05 \*\* p < .01 \*\*\* p < .001

(Valfort, 2017) 모든 세대에 걸쳐 낮은 수준의 동의수준을 보였다라는 점은 일본 역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 사회의 경우 이미 1960년대에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과 유럽 수준의 이혼율에 도달한 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중 한국과 더불어 두 번째로 낮은 혼외출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변화의 경험에 있어 두 국가 간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 낮은 수용성을 보인다는 점은 향후 서구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더 명확한 설명 논리를 밝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V.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각 세대의 가족의 역할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정부책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 연령제공, 성별, 학력 등의 요인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의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바, 세대별 차이와 계층에 따른 차이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세대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IMF 세대와 386세대의 특이성이, 일본의 경우에는 사토리세대의 특이성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중 386세대와 사토리세대는 공통적으로 정부 및 공적 영역의 역할에 대해 낮은 신뢰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386세대의 경우 초기 성년기였던 80년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부 및 권력집단에 투쟁하였던 경험이 깊이 각인되어 여타 세대에 비해서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 더욱이 현재의 386세대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더해지면서, 기존에 386세대가 지니고 있었던 정부 및 권력집단에 대한 고유의 불신에 더하여 자녀 양육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책임성에 대한 낮은 동의 수준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사토리 세대의 경우 8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일본의 장기불황기에 성장하여 불황을 내면화한 세대이다. 정부책임성 영역에서 이들 세대의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토리세대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토리세대의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세대보다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경쟁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는 욕망과 집착을 버린 채로 소소한 삶의 의미를 찾는 탈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윤석명 외, 2013), 이들 세대의 정부 및 제도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古市惠寿, 2014). 이는 연령을 통제하고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사토리세대의 실재성을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토리 세대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고유성은 향후 복지정책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세대 갈등을 예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면서 의도치 않게 드러난 또 하나의 균열은

바로 젠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은 세대와 계층의 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함께 투입된 일종의 통제변수이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에서 6개의 분석 문항 중 4개의 결과에서 성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성별이 인식 차이에 있어서 단일 변수로서는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두드러졌다. 모든 변수의 영향력을 표준화하여 비교하는 베타값을 기준으로 볼 때, 노부모 부양책임이나 변화하는 가족 수용성에 대해서 성별은 가장 큰 차이를 야기하는 변수였다. 보놀리와 호이저만(Bonoli and Häusermann, 2009)은 향후 사회정책형성의 갈등선(conflict line)은 전통적인 갈등축인 수직적 계층구조에 더하여,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으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 증가 등 2차 인구변천의 과정을 이미 겪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지점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인구학적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탈물질주의적인 가치 인식이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되곤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가족모델로부터 이탈은 지속되면서도, 여전히 비전형적 가족에 대한 수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지점은 향후 서구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이것이 변화의 시점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화 요인에 의한 변이인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문항에 따라서 연령과 연령제곱항의 다른 효과가 관찰된 것 역시 이번 연구의 성과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60세 이상인 집단이 포함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계층의 영향을 더 정확히 살피기 위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변수를 포함해야 했으나, 조사항료가 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서 개인의 경제적 위치를 측정함에 있어 소득변수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다른 형태의 자료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8년 6월 15일 | 심사일: 2018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26일

## 참고문헌

- 권복순·김태자. 2008. “2, 30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제1차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자료집, 523-548.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예희. 2010. “여성의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 구조와 결정요인.”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207-248.
- 김수정·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한국사회학』 47(2), 101-141.
- \_\_\_\_\_. 2001.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2(1), 79-105.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홍규·원애경. 2003. 『상답심리학』, 형설출판사.
- 노리토시 후쿠이치. 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박경숙·서이중·김수중.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 경제, 문화, 정치적 메커니즘』, 태산출판사.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나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4, 63-76.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병영.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 『현상과인식』 31(1·2), 81-101.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_\_\_\_\_. 2017.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경성대학교 출판부.
- 사사노 미사에. 2017.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 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일본연구』 72, 37-64.
- 송다영. 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22, 231-254.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광영·문수연. 2014. “계급,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 『산업노동연구』 20(1), 31-64.
- 안호용·김홍주. 2000.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3(단일호), 89-132.
- 어수영. 2006.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도서출판 오름.
- 옥선화·성미애·신기영. 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경제와 사회』 81, 61-88.
- 윤석명·류건식·이정우·우혜봉·Takayasu Yuichi·Ismo Risku·남효정·서희정. 201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 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석. 2007.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2), 161-202.
- \_\_\_\_\_.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31-52.
- 정옥분·정순화·김경은·박연정. 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 정재기. 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한국인구학』 30(3), 157-178.
- 정윤경·김경희·배진아·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研究論叢』 32, 49-92.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최균·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0), 223-254.

- 허석재. 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정신문화연구』 37(1), 257-290.
- Attias-Donfut, C. and S. Arber. 2002.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ies*. Routledge.
- Bonoli, G. and S. Häusermann. 2009. “Who Wants What from the Welfare State? Socio-structural Cleavages in Distributional Politics: Evidence from Swiss Referendum Votes.” *European Societies* 11(2), 211-232.
- Esping-Andersen, Gøsta.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 Kohli, M. 2010. “Age Groups and Generations: Lines of Conflict and Potentials for Integration.” In Tremmel J., ed.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Rush Hour” of the Cohorts 1970–1985 in a Generational Comparison*. Springer, Berlin: Heidelberg. 169-185.
- Mannheim, K.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ited by Paul Kecskemeti. Routledge & Kegan Paul.
- Ochiai, E.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219-245.
- Preston, S. H. 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Demography* 21(4), 435-457.
- Takase, M., K. Oba, and N. Yamashita. 2009. “Generational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Job Turnover Among Japanese Nurses: An Exploratory Comparative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7), 957-967.
- Valfort, M. 2017. LGBTI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 No. 198.
- Yamashita, J., N. Soma, and R. K. H. Chan. 2013. “Re-examining Family-centered Care Arrangements in East Asia.” In M. Izuhara, ed. *Handbook on East Asian Social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 Abstract

## Generation or Class: Research on Family Values in Korea and Japan

Suk Eun, Seung Jae An, Sunyu Ham, and Beag Eui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test the generation theory which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Korea and Japan as noted in such expressions as “880,000-KRW generation” and “Satori generation.” Preceding studies have argued that actual generations have been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experiences caused by rapid social changes in Korea and Japan. On the contrary,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generational gap is one aspect of the class inequality and that the generation theory is underestimating other social cleavages (i.e. social class). To examine these competing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public perception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families and the government.

Using the data from 972 Koreans and 478 Japanese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Family Perception Survey,”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IMF generation, the 386 generation in Korea and the *Satori* generation in Japan,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generation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noting that both the 386 generation and the Satori generation show significantly low reliability on the role of government when their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are controlled. Results also show differences by respondents’ social class. In Korea, the lower class strongly disagreed with associative mating and were more open to same sex marriage than other

social classes. In Japan, the middle class showed disagreement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pension and the lower class favored expanded governmental roles in childca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gender is a meaningful factor which explained perception gaps, and discussed about generation theory in Korea and Japan.

**Keywords |** generation conflict, family values, 386 generation, *satori* generation, comparative studies